'2022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021.10.16.)

• 해설 : 이승철(2022년 6월 현재 법령·제도 기준 해설)

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③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거해서 수행되는 문서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④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해설

① (○) **전문화와 분업** :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름. 자기가 맡은 분야의 유능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해 분업화된 직무를 맡김. 사람의 전문화와 일의 전문화(분업)는 업무의 능률성을 높임.
② (×) 관료로서의 직업은 잠정적이 아닌 생애의 직업이자 전임직업이므로 겸임은 금지되며, 직무수행 대가로 보수를 규칙적으로 지급받는다. 봉급은 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연공급이다. 따라서 업적·실적에 따른 보수체계인 성과급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 **관료의 채용 기준** : **기술적 전문성, 능력**(세습·정실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이나 전문능력에 의해 시험·자격증 등 기술적 기준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
- **봉급 지급의 기준** : 성과가 아니라 지위·기능·근무연한이며 **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연공급 지급
- **승진의 기준** : **실적과 연공**

③ (○) **문서주의** :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됨. 문서화는 업무의 지속성·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객관성·정확성·책임성·예측가능성을 높임.
④ (○) **법규에 의한 지배(합법성·공식성)**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며(직위와 [행정수단] 소유의 분리, 직책의 사유화 불허) 권한 남용이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짐.

답 ②

[관련기출]

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7급
① 관료제(bureaucracy)는 관료(bureaucrat)에 의하여 통치(cracy)된다는 의미로서 왕정이나 민주정(民主政)에 비해 관료가 국가정치와 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②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며 과두제(oligarchy)의 철칙이 나타날 수 있다.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력 등을 들 수 있다.
④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2. 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정승진
①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② 관료제는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③ 머튼(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규칙의 준수에 대한 강요는 동조과잉을 초래하며 최고 관리자의 지나친 통제는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골드너(Gouldner)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3.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8급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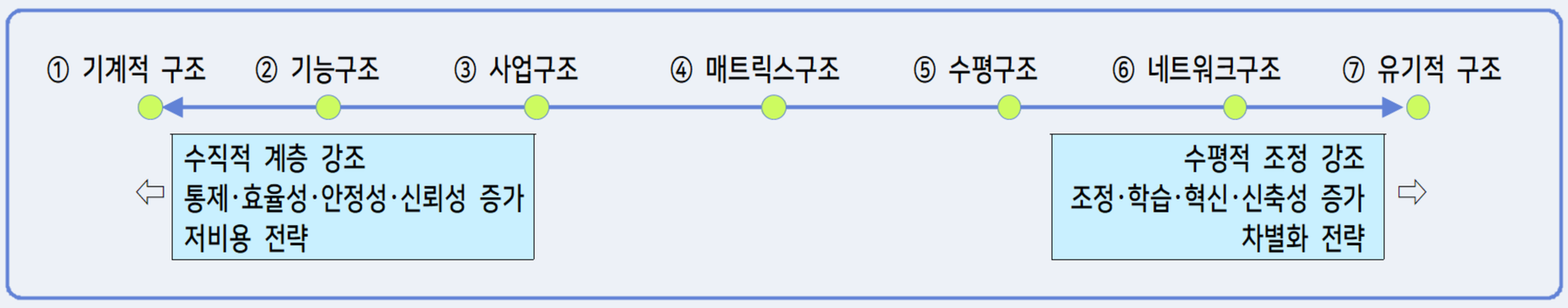
답 1. ④ 2. ① 3. ④

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층제의 특징을 가진다.
②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업구조를 가진 조직은 제품별·산출물별로 구성된 자기완결적 사업부서를 가지며, 이들 사이의 업무조정은 매우 쉽다.

해설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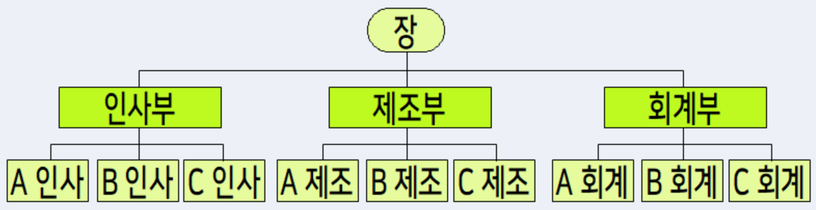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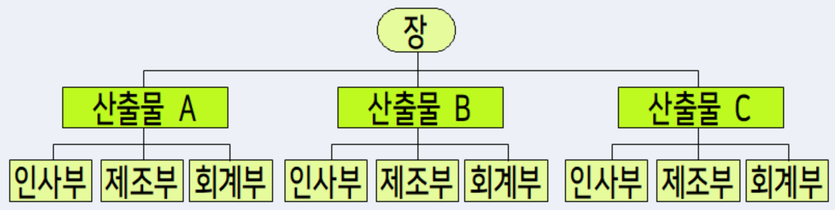


② (○)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행렬조직, 복합구조, 주형(鑄型)조직)** : 기술적 전문성(기능구조의 특성)과 신속한 대응성(사업구조의 특성)이 동시에 강조됨에 따라 등장한 조직구조로서 전통적인 계서적 특성을 갖는 수직적(종적)인 기능구조(직능조직)와 수평적(횡적)인 사업구조(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물리적으로x)으로 결합시켜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 기능부서 통제권한은 수직적으로,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2원적 권한체계. 조직구성원은 기능과 사업의 양 조직에 중복 소속되고 기능적 관리자(주로 인사)와 프로젝트 관리자(주로 사업) 간에 권한이 분담됨.

③ (○) **네트워크 구조(network structure)** : 한 조직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자체기능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회계·제조·포장·유통 등 여타 부수기능들은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outsourcing)를 통하여 연계·수행하는 구조. 각 조직의 독립성이 높으며, 기존 관료제와 달리 수직적 계층관계를 띠지 않고 느슨한 연결을 가짐. 구성원의 활동은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통합됨. 활발한 상호작용과 정보공유를 통해 수직적 통합(계층 축소)과 수평적 통합(경계최소화)이 이뤄지며 지리적 분산의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공간적 통합을 추구.

④ (×)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사업부제)** :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부서화 방식으로서 산출물구조, 전략사업단위로 불리기도 함(Williamson의 M형 구조). 사업별로 부서화한 후 각 사업부서 내에는 기능별로 부서화하므로 사업부서는 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정 지역에 봉사하거나, 특정 고객에게 봉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적 직위들이 모두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완결적 단위의 조직구조. **사업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증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서 간 조정은 곤란.** 부서 간 경쟁이 심화되면 조직 전체적인 갈등 초래, 조직 전반적인 목표 달성 곤란 등 부정적 결과 초래.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

구분	기능구조	사업구조
형태		
장점	㉠ 같은 기능을 묶어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직무분업과 구조설계가 가능하며, 일의 중복과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높이므로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원 간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킴. ㉢ 구성원이 비슷한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집력이 강하며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 ㉣ 높은 공식화에 따른 내적 통제로 **예측가능성**이 높음.	㉠ 자기완결적 기능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상호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성과관리체제에 유리.** ㉣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기능구조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관과 동기**를 갖게 함. ㉤ **사업부별 분권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최고결정자의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전략적 업무에 집중 가능(기획의 Gresham 법칙 방지)
단점	㉠ 부서별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특한 시관과 목표관을 가지기 때문에 기능부서 **간 조정·협력 곤란(기능전문화에 따른 비효율 발생).** ㉡ 의사결정 권한이 고위관리자에게 집중되면서 **집권적 구조를 강화시키며 최고관리층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대응성이 느림.** ㉢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동기부여에 부적합.**	㉠ 산출물별 기능과 생산라인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규모의 불경제** 초래. ㉡ 기능직위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곤란.** ㉢ **사업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증진**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서 간 조정은 곤란.** ㉣ **부서 간 경쟁이 심화**되면 조직 전체적인 갈등 초래, 조직 전반적인 목표 달성 곤란 등 부정적 결과 초래. ㉤ 각 부서별로 산출물이 생산되므로 제품라인 간 통합(조정)과 표준화 곤란.

답 ④

[관련기출]

1.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사업구조 (divisional structu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7급(인사·조직론)

①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에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2.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 경정승진

① 사업구조는 사업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시설과 자원 등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③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3.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1. ③ 2. ④ 3. ①

3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리더십은 상황, 행태, 자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은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③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은 리더에게 유리한 리더십 상황(단순하고 명확한 과업구조, 강한 직위 권력 등)에서 인간관계 중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④ 리더십은 조직의 공식적 구조와 설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줄 수 있다.

해설

③ (×) 상황의 유리성이 아주 유리하거나 아주 불리한 경우 과업중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봄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1967)
① **리더의 유형** : 리더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LPC ; Least Preferred Co-worker)에 대한 리더의 평정점수에 의해 분류.
㉠ **LPC 점수 높음**(싫어하는 동료를 그 사람과의 관계나 정을 고려해 호의적으로 평가) ⇨ **관계지향**(relationship-motivated) 리더
㉡ **LPC 점수 낮음**(싫어하는 동료를 비호의적으로 평가) ⇨ **과업지향**(task-motivated) 리더
② **리더십 상황적 유리성 결정변수** : 리더십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 리더와 부하의 관계-상호 신뢰감
㉡ **과업구조**(task structure) : 리더가 담당하는 과업의 구조화 정도(과업의 목표·달성방법·성과기준의 명확·구체성)
㉢ **직위권력**(position power) : 직무수행을 위해 리더의 직위에 조직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권력
③ **상황에 따른 적합한 리더십**
㉠ **상황이 유리한 경우나 불리한 경우** ⇨ LPC 점수가 낮은 **과업지향 리더가 효과적임.**
㉡ **상황유리성이 중간 수준인 경우**(⇨ LPC 점수가 높은 **관계지향 리더가 효과적임.**

답 ③

[관련기출] **휘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유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2005 경기9급(2)
① 리더십의 효과성 여부는 특정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한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② 상황이 매우 유리할 때에는 인간관계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③ 상황의 유리성이 중간정도일 때에는 인간관계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④ 상황이 매우 불리할 때에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이다.

답 ②

4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방법이다.
②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③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가 참여할 여지가 적다.
④ 조직발전은 조직의 구조나 형태를 바꾸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해설

① (○) 조직발전은 조직 내 인간의 가치관·신념·태도의 변화를 통해 조직의 전체적 개혁을 성취하려는 과정으로서 조직혁신 전략의 일종(인간·행태적 접근)이며 체계적·계획적·의도적인 변동을 추구한다.
③ (×) 조직발전은 집단 및 조직의 여러 과정에 초점. 인간적·사회적 과정과 문제해결을 지향한 협동적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지향성을 지닌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은 아니다. **조직발전은 최고관리층에 공식적 지휘본부를 두고, 최고관리층의 참여와 배려 하에 상위계층에서부터 하향적으로 진행된다**. 단, 단순히 계층제를 통해 인위적·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최고관리층과 하위계층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한다.
③ (×) 행태과학적 지식·기술을 지닌 전문적 개혁상담자(change agent or consultant)를 필요로 한다(외부 전문가 활용).
④ (×) 조직발전은 조직혁신의 접근법 중 인간·행태적 접근방법으로서 조직 구조나 형태의 변화보다는 인간의 가치관·태도·행동을 변화시켜 조직문화의 기능을 개혁하는 것이다.
• **OD의 목적** : 조직 내 인간적 가치 향상 + 조직체의 효율성·효과성·건전성 제고(구체적 목적은 조직여건·문제에 따라 상이). ㉠ 변화대응능력 증진, ㉡ 조직과 개인의 신축성·적응성·창의성·민주성 제고, ㉢ 조직의 유지·통합·문제해결능력 향상, ㉣ 구성원의 신념·가치관 변화와 이에 따른 행태의 수정.

답 ①

[관련기출]
1.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7급(인사·조직론)
①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②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④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2.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서울7급
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의도적인 개입방법이다.
② 감수성훈련은 동료 간·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실제 근무상황에서 실시하는 기법이다.
③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형 리더를 가장 효과적인 관리유형으로 꼽았다.
④ 변화관리자의 도움으로 단기간에 급진적 조직변화를 추구1한다.

3.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정승진
① Y이론의 인간관에 바탕을 둔 성장이론(growth theory)을 가정하고 있다.
② 감수성훈련, 관리망훈련, 팀 빌딩기법, 과정상담과 개입전략 등의 주요 기법이 있다.
③ 행태과학의 지식이나 기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이 요청된다.
④ 인간행태, 조직구조, 기술, 업무에 초점을 두어 조직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4.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해경간부
①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②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③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개혁 관리 방식이다.
④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이다.

5.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 경정승진
①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권력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②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식 관리 방식이며,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기법 중 하나이다.
③ 조직의 실속, 효과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전반에 걸친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④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6. 조직발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회9급
① 조직의 인간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②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행태과학의 한 유형이다.
③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조예가 있는 상담자(consultant)를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개혁추진자의 역할을 맡게 한다.
④ 조직발전은 결과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⑤ 실제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진단적 과정이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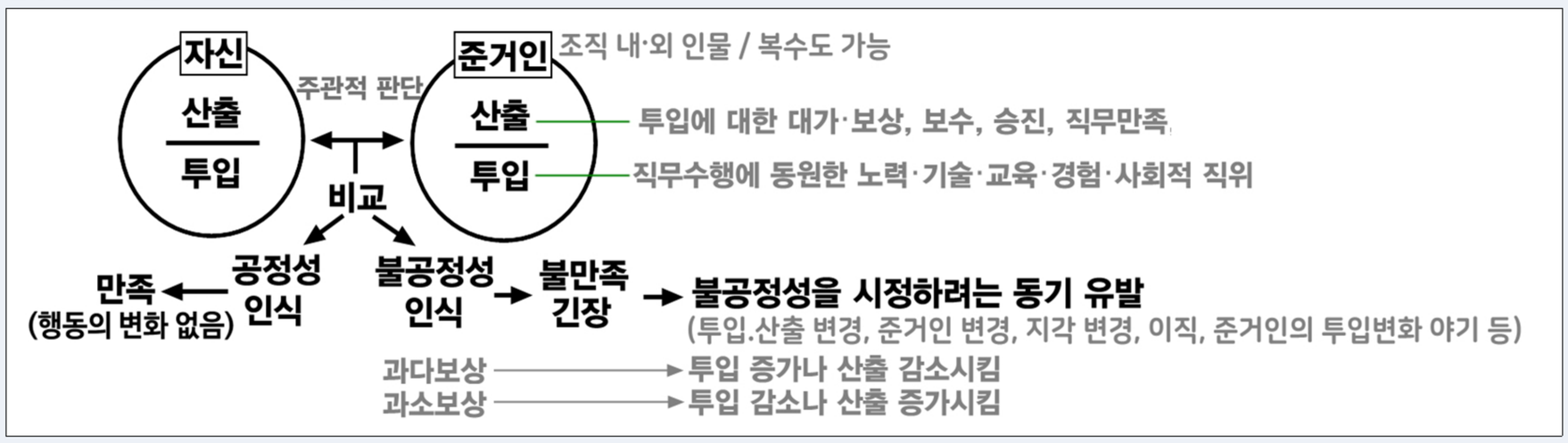
답 1. ③ 2. ① 3. ④ 4. ① 5. ④ 6. ④

5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하위 욕구를 완전히 충족해야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근로자들의 자율행동과 자기규제를 중시한다.
③ 아담스(J. S. Adams)의 형평성(공정성)이론은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투입비율이 타인의 산출-투입비율과 대등하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④ 브룸(V. H. Vroom)의 V.I.E. 기대이론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과 함께 만족감을 동기부여의 주요요인으로 본다.

해설

① (×) 매슬로우(A.H.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욕구는 우선순위에 따른 5계층의 욕구에 따라 순차적·연속적으로 발현. 욕구의 발현이 순차적이지만,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되는 것은 아님. 어떤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됨. 단계를 건너뛰는 욕구 발현은 나타나지 않음. ⇨ 만족·진행 접근(욕구의 순차적·연속적·상향적 발현)
② (×) 근로자들의 자율행동과 자기규제의 중시는 Y이론의 관리전략.
③ (○)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 : 자신의 산출 / 투입 비율(equity ratio ; 사람이 지각한 비율)을 조직 내·외의 준거인(referent person)의 것과 사회적 비교를 통해 처우의 공평성 여부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공평하다고 느끼면 만족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불만족을 초래하고 긴장을 수반한다. 이 때 인간은 불공평 상태에서 공평한 상태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동기유발이라 부른다. 즉 이 이론에서는 불공평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동기유발로 본다.



④ (×) 과정이론인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의 욕구충족과 직무수행(성과) 간 직접적·적극적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욕구와 만족의 동기유발체계에 '기대'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동기유발과정을 설명한다(예 돈 벌 욕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본다). 브룸(V. H. Vroom)의 V.I.E. 기대이론(선호·기대이론)은 내용이론(욕구이론)과 달리 동기유발과정에서 욕구충족(만족)이 아니라 기대감(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인가(유의성 : Valence)이 동기유발의 주요요인이라고 보았다.

답 ③

[관련기출]

1.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2.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4 국가9급

㉠ ERG이론 : 앨더퍼(C. 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 X·Y이론 :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 Maslow)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였다.
㉢ 형평이론 :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 기대이론 : 브룸(V. 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답 1. ① 2. ②

6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③ 관료집단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④ 능력에 따른 채용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설

④ (×) 실적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대표관료제는 능력·실적이 기준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인구구성을 고려한 임용이므로 전문적 능력이 미흡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전문성·능률성·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의 특징 구별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의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 수직적 평등의 확보,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기회의 평등 / 수평적 평등의 확보,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엽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답 ④

[관련기출]

1.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경채9급

㉠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실적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 하지는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의 발달로 인해 발전한 측면이 크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경찰간부

①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다.
② 적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④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3.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행정사

①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②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③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해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④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
⑤ 집단보다는 개인에 역점을 두므로 자유주의와 부합한다.

4.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7급
①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7급(2)
① 관료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② 역차별을 초래하여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③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공공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6.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②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 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③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공무원 간의 견제와 내적 통제가 강화된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⑤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서비스를 촉진한다.

7.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으로 보기 힘든 것은? 2004 서울9급(1)
① 정부관료제가 사회 각계 각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다.
②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③ 각계 각층에서 충원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가져온다.
⑤ 소외되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시켜준다.

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7 대구9급
①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② 한 나라의 모든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나라의 인구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의미한다.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④ 관료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답 1. ② 2. ② 3. ③ 4. ① 5. ① 6. ④ 7. ③ 8. ④

7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를 고려한 인사행정을 수행한다.
②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동일 직렬에서의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여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③ 직무 간 인사이동이 용이하여 직무관련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④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① (○) 직위분류제는 직무(Job) 또는 직위(Position)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에 따라 직류·직렬·직군별로 수직적 분류 후, 직무의 곤란도(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급·등급별로 수평적 분류를 한다.
② (○) 동일 직렬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와 전문행정가 양성에 기여하며 직무중심적 동기유발을 자극한다.
③ (×) 동일 직렬에서의 승진·전보는 가능하나, 다른 직무로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직무간 인사이동이 곤란하여 인사관리의 탄력성·신축성이 낮다.
④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equal pay for equal work)에 입각한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체계의 형평성(직무수준과 보수수준의 균형) 확보한다.

답 ③

[관련기출]

1. 공직의 설계 방식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회9급
① 직위분류제는 직책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 직무급 수립에는 기여하나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공직자를 특권집단화할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직무 간 협의와 조정이 용이해진다.
④ 계급제는 차별화된 직무급 체계 확립은 어려우나 인사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⑤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는 불리하나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직무 전문성이 축적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에 적합하다.

2.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6 사회복지9급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답 1. ④ 2. ①

8 **페리(J.L. Perry)가 주창하는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사부문의 조직원들과 동기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②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은 물질적·외재적 동기보다 사명감과 이타심 같은 공공에 대한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가정한다.
③ 공공봉사동기이론은 높은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④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따르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은 공익실현과 사회적 형평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③ (×) 공공봉사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공익 증진 및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고유한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Perry & Wise, 1990). 일반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공공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봉사동기를 가진다. 공직봉사동기의 개념은 크게 ㉠ **직업 선택시 공직을 선택하게 되는 직업선택 동기로서의 개념**(attraction-selection- attrition)과 ㉡ 공공에 봉사하고자 하고, 금전적 보상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타적 행동 결정의 추동기제로 나뉜다(이명진, 2010).

• **공공봉사동기의 3가지 기본명제** - Perry & Wise(1990)
㉠ **개인의 공공서비스동기가 크면 클수록 개인이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려는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 공공조직에서는 공공서비스동기가 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다.
㉢ 높은 공공서비스동기수준을 갖는 사람을 유인하는 공공조직은 개인성과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실용적인 인센티브에 보다 적게 의존할 것이다.

④ (○) 공공봉사동기의 **규범적 차원**과 관련된다.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 공직동기, 공공서비스동기)이론 - 페리와 와이즈(J. Perry & L. Wise)

㉠ **의의** : J. Perry와 L. Wise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공공 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유일하게 혹은 우선적으로 비롯되어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인 '공직동기'가 있다고 봄. 페리는 **신공공서비스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한 관료들의 동기유발을 중시.**

㉡ **공직동기의 의미** :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타적 의도 혹은 공직윤리. 금전적·물질적 보상 등 재정적·외재적 요인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 등 내재적 요인에 주목하여 **공직종사자들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조직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동기.**

㉢ **공직동기의 차별적 요소**

합리적 차원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바탕으로 한 행동	**공공정책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공무원의 효용함수는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 중요한 사회정책에 대한 동일시, 특정의 이해관계에 대한 옹호[지지] 등으로 구성)
규범적 차원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에 따른 행동, **공익을 수행**하려는 욕구	**공익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예 **공익봉사의 욕구,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심, 의무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성, 약자와 소수에 대한 복지**
정서적 차원 (감성적 차원)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감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한 행태(합리적 차원과 달리 효용이 존재하지 않고 희생에 의한 피해만 따름)	**동정**(compassion)과 **자기희생**(self-sacrifice) 예 애국심과 같은 정의감이나 공복으로서의 의무감, 또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애정이나 동정,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정책몰입.

답 ③

9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② 여러 부처의 같은 계급 공무원 사이의 횡적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다.
③ 보수와 업무부담 간 형평성을 높이기에 가장 적절한 제도이다.
④ 계급에 따른 조직 내 상하관계와 차등대우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된다.

해설

① (○) 학력·경력·자격·능력과 같은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rank-in-person)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의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② (○)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축성이 높다. 일반행정가를 중시하므로 계급만 동일하면 보수의 변동 없이 전직·전보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순환보직의 범위가 넓다(수평적 융통성 높음).
③ (×) 보수체계는 생활급(생계급)이나 연공급 위주이며, 동일 계급 하에서는 직무 종류·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므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라는 직무급 확립이 곤란하다. 따라서 업무와 보수의 형평성이 낮다(직무의 책임도·곤란도와 보수수준이 비례하지 못함). 보수와 업무부담 간 형평성은 직무급 체계인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④ (○) 계급 간의 차별, 엄격한 계층제를 특징으로 한다. 계급간 학력·경력·출신성분에 큰 차이가 있고, 사회적 평가나 보수의 차이가 크며, 계급 간의 승진도 매우 곤란하다(수직적 경직성이 높음).

답 ③

[관련기출]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17 군무원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배치전환의 신축성·융통성	높음	낮음
② 인사권자의 리더십	약함	강함
③ 수평적 조정·협조	용이	곤란
④ 직무와 보수의 형평성	낮음	높음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9급
① 계급제에서는 인적자원의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제한적이다.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인사업무, 예산업무, 정책집행업무 등 서로 다른 직무 간의 상호이동이 어렵다.
③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④ 계급제에서는 직무에 따른 보수의 형평성이 직위분류제보다 낮다.
⑤ 계급제에서는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계급제의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2018 경찰간부

㉠ 인적자원의 비탄력적 운용	㉡ 전문행정가 부족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저하	㉤ 부서간 협력의 곤란	㉥ 보수와 업무부담의 형평성 결여
㉦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편의적 기준 개입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9급
①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인사이동이 경직적이다.
③ 계급제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④ 계급제에서는 보수 및 직무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다.
⑤ 직위분류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곤란하다

답 1. ② 2. ③ 3. ② 4. ①

10 우리나라 예산 및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해설

③ (×), ④ (○)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고, 예산안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단,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원칙적으로 폐지·삭감권만 가지므로 예산안 심의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답 ③

[관련기출]

1.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국가7급
①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③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9급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답 1. ① 2. ②

예산과 법률

구 분	예 산	법 률
제출·제안권자	정부(행정부제출 예산제도)	국회 또는 정부
제출 및 심의 기한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심의	제한 없음
국회의 심의 범위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효력발생요건 (공포)	국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 절차 필요 없음 행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공고	공포 필요(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
형 식	예산의 형식	법률의 형식
시간적 효력	1회계연도에 한정된 한시적 효력	폐지 전까지는 계속적 효력
구속력(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 국민 모두 구속
효력범위(지역적 효력)	국내·국외	원칙적으로 국내(국외-특별한 경우)
변경·수정(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을 수정할 수 없음	법률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음
관계	① **양자의 관계** : 예산은 하나의 행정적 형식이고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므로,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지지만 예산과 법률이 단순히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음. 예산과 법률은 서로 형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성질과 효력을 달리함. 따라서 **예산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음.** ② **상호구속성** ㉠ **세출예산이 성립해 있더라도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출할 수 없음.** ㉡ **법률이 지출을 명하더라도 지출의 실행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실제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음.** ㉢ 국회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세입 변동이 예측되는 법률의 제정·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음. ③ **재정소요 추계** : 재정이 소요되는 법령안 제·개정시 법령안 시행일부터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해야 함.	

11 예산결정이론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획예산(PPBS)와 영기준예산(ZBB)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예산결정제도이다.

② 점증주의 예산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산배분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을 결정하게 될 때 나타난다.

③ 예산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④ 점증주의에 기반한 단절균형 예산이론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는 급격한 단절적인 예산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④ (×) 단절균형이론은 사후적 분석으로는 적절하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바움가트너(F. Baumgartner)와 존스(B. Jones)

㉠ 정책변화나 예산변화에 있어서 빈번한 소폭적 변화와 간헐적인 대폭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기존의 점증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이론으로 정책이나 예산은 균형상태(equilibrium)가 지속되다가 단절적인 변화(punctuation)가 발생하고 다시 균형상태가 지속된다는 이론. 단절은 대폭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고, 균형은 소폭적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는 이유와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 정책변화나 예산변화가 대부분 점증적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점증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점증적 변화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이론이나 정책이론에 있어서 점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

㉢ 단절균형은 진화생물학,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으로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이론에 수용됨. 균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의제목록, 정책독점, 정책하위체제, 제한적 합리성 등이 활용되고, 예산의 단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정책 독점의 붕괴, 대중매체의 관심, 정책이미지, 정책투입활동 등이 활용됨.

㉣ 정책결정을 소수의 정책결정자들만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닫힌 시스템이자 구조인 정책독점 상황에서는 단일의 정책이미지가 폭넓게 지지를 받아 지속적인 안정이 유지되고 점증적 변화만 나타남. 그러나 정책이미지의 변화로 인해 대중매체·여론에 의해 어떤 이슈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증대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기존의 이해관계자 간의 권력 균형이 깨지며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됨. 정책독점이 붕괴되면 정책이슈는 정책하위체계로부터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나타나 오랫동안 지속되던 정책이나 예산에 단절이 발생함.

㉤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적((負的)으로 환류(negative feedback)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하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正的)인 환류(positive feedback)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 또는 예산의 변동이 발생.

㉥ 한계 : 사후적 분석으로서는 적절하나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답 ④

[관련기출]

1.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7급(상)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교육행정9급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답 1. ① 2. ④

12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청렴의 의무 ③ 친절 공정의 의무 ④ 복종의 의무

해설

① (×) 이해충돌방지의무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됨.

행정윤리의 내용(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율)

법적 타율적 규범	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 * 충성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헌법에 규정된 의무 ×)로 분류하기도 함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의무, ⑦ 종교중립의무, ⑧ 선서의무, ⑨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⑩ 직장이탈 금지, ⑪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⑫ 정치운동 금지, ⑬ 집단행위 금지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규정.
	공직자윤리법	① 이해충돌방지의무,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인도,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3년) 및 행위제한, 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부패행위신고(내부고발)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5년), ③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④ 공직자의 청렴의무 * 국민감사청구, 부패유발 요인 검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등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②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부정청탁의 신고, ④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금지품등의 신고, 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기타 개별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직무의 공정·청렴한 수행,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과 직무관련자 우대나 차별 금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곤란시 직무수행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③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익 추적·환수) ④ 공직선거법(선거범죄자 임용제한)
행정적 자율적 규범	추상적 규범	공무원헌장(2016. 대통령훈령.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을 대체)
	구체적 규범	공무원행동강령(2005. 대통령령)

답 ①

[관련기출]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7급

①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② 정무직공무원 등의 재산등록 의무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답 ④

1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③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해설

① (○)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위원들이 토론(국무회의)을 통해 연도별·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Top-Down),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별사업별 예산을 편성·제출하여 협의·조정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정부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공유재(비배제성·경합성)적 특성에 따른 공유지의 비극(과다소비와 자원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는 부처에게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주인의식'을 부여해 유사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예산의 주인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② (×) 사업별 재원배분에 관한 각 부처 자율권의 인정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부처 장관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 중심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따라서 성과관리제도와 연계 필요).
③ (○)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사업관점에서 국정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이 결정되므로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다년도 계획기능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④ (○) 지출 총액을 결정하고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구체적 사업별 예산을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임.

답 ②

[관련기출]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7급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③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답 ①

14 우리나라의 국세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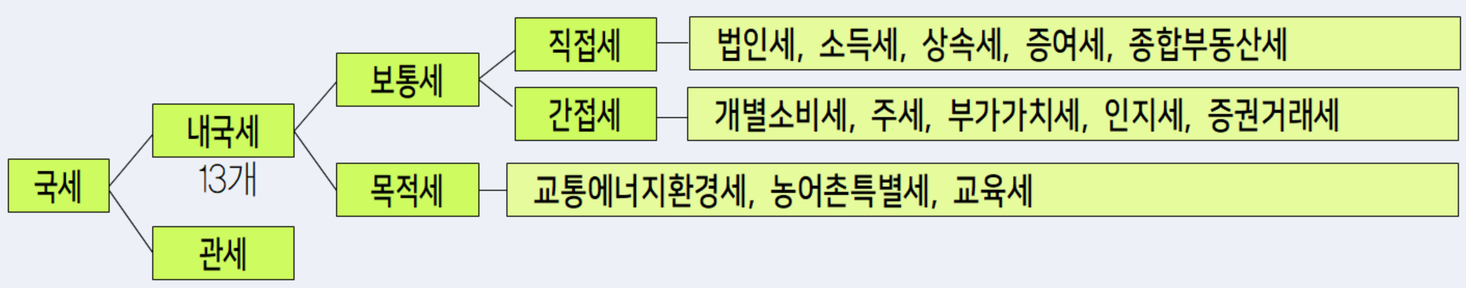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주세	㉥ 자동차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국세로서 직접세 / ㉣㉤ 국세로서 간접세 /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이 중 주행분은 간접세
• **국세 중 간접세** : 개·주·부·인·증권
• **지방세 중 간접세**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레저세

국세의 유형(14개 세목)



•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는 간접세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성격이 혼재. / 증여세는 직접세, 증권거래세는 간접세
•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2005), 국세인 부당이득세 폐지(2007).
• 개별소비세의 종전 명칭은 특별소비세. 교육세는 국세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시한을 연장하여 2024년까지 존속하고 이후 개별소비세로 전환 예정.

지방세의 종류(과세주체별)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시세·광역시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주1),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주2)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 세	등록면허세		
기초자치단체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주3)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 주1)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을 자치구세로 함. 주민세 개인분만 광역시세.
• 주2)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21% ×)를 재원으로 함. 시·군·자치구에 납입·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은 시·군·자치구세로 함
• 주3) 특별시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을 특별시세로 함.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는 특별시와 공동과세.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 항목을 광역시세로 함(예 등록면허세). / 특별자치도세와 세종특별자치시세에는 전체 지방세가 포함됨.
•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함.

답 ①

[관련기출]

1.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8 국가7급

㉠ 취득세	㉡ 자동차세	㉢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 등록면허세	㉥ 주세

① ㉠, ㉣ ② ㉡, ㉢ ③ ㉢, ㉤ ④ ㉣, ㉥

2. 다음 조세 중 국세이며 간접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2019 국회8급

㉠ 자동차세	㉡ 주세	㉢ 담배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18 국회8급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3. 다음 내용에서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21 해경승진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상속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1. ④ 2. ④ 3. ① 4. ④

15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특성에 꼭 맞는 자기만의 최선의 방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②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성과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조직 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는 과학적 관리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④ 과학적 관리론이 바라보는 인간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이 제시하는 인간형과 일맥상통한다.

해설

① (×)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구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관리원칙인 유일최선의 원리(one best way)를 찾는다. **조직업무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식**이며 모든 각 구성원 특성에 맞는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
② (○) 인간관계론의 궁극적 목적은 생산성이며 이를 위해 조직 내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욕구,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③ (×)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는 **인간관계론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매이요(E. Mayo), 뢰슬리스버거(F. Roethlisberger) 등 하버드경영대 교수팀이 서부전력회사인 호손공장에서 생산성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1924년/1927~1932년).
④ (×) 과학적 관리론이 바라보는 인간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이 제시하는 인간형과 일맥상통한다.

답 ②

[관련기출]

1.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소방간부

① 인간을 정서적 존재로 인식한다.
②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과 참여를 강조한다.
③ 비공식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④ 조직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경시한다.
⑤ 조직운영의 민주화가 궁극적 목표이다.

2.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행정사

① 과학적 관리론은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② 메이요(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관계론은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⑤ 과학적 관리론은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답 1. ⑤ 2. ①

16 **정부(government)의 통치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② 거버넌스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③ 거버넌스체제에서의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은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① (○) 오늘날 글로벌 수준의 변화, 즉 기후변화, ICT나 웹 등의 첨단기술 발전, 위기재난안전, 테러, 질병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wicked issues or problems)로 변해가고 있다. 난제는 일련의 문제가 복합적·중복적이며, 문제해결에 수많은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하므로 사회적 복잡성 수준이 높다. 문제해결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상이한 조직과 영역, 상이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며, 문제 정의와 해결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상호 연계된 이슈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한다. 난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일치의 규모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며 난제를 처리할 때 정부 조직 경계를 넘는 협업행정이 필요하다.

② (○)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 독점적·수직적 계층제와 일방적 통치를 특징으로 하는 Government(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국가적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식하는 협력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

구분	권력관	국가를 보는 시각	권리 및 조정방식	시민을 보는 시각
Government(정부)	엘리트주의적 권력관(절대성)	단일 공동체	명령, 지시, 통제 중심	피통치자
Governance(국정관리)	다원주의적 권력관(상대성)	이질적 집단의 연합체	참여를 통한 합의 중심	주인

③ (×) 거버넌스체제에서도 정부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예 국방·외교·치안·과세 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나 조정자(coordinator)나 역할을 중시한다.

④ (○) **집행에 대한 통제 상실 - 분절화(fragmentation)** : 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 여러 조직과 기관이 관여하여 추진하므로 분절화 현상이 나타나고 집행에 대한 통제 상실의 가능성이 있음.

답 ③

17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형화 모형은 강압·모방·규범 등을 통해 정부 간 정책전이가 일어나면서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② 체제의제는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를 의미한다.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은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권위적인 계층주의사회에서는 내부접근형 정책의제설정이 나타나기 쉽다.

해설

① (○)

동형화(Isomorphism)이론 - 디마지오와 파월(P. Dimaggio & W. Powell, 1992)
① 어떤 조직이든 생성시에는 다양한 형태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동질화의 압력이 나타나 동형화가 됨. 의제설정과정도 동형화의 압력을 받음. 어떤 정책의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슷한 사회문제를 겪은 정부의 정책의제를 모방함.
② 정부들 간 정책전이현상(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아이디어의 전파)은 동형화로 이해 가능.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 채택이 필요하며 다른 국가에서 널리 채택된 정책은 의제설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용이.
③ 동형화의 근거와 방식
㉠ 모방적 동형화 : 과거나 외국의 선례 활용. 자발적으로 주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 강압적 동형화 : 국내경제활동이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경우. 공식·비공식 압력에 의한 순응
㉢ 규범적 동형화 :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작업조건·방법을 정의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남

② (×)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는 제도적 의제(공식·기관·정부·행동의제)이다.

체제의제 (systematic agenda)	**= 공중의제·토의의제·환경의제** : 많은 사람들(일반대중)이 관심을 갖고(공적 관심),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며(공유),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인정)하는 의제
제도적 의제 (institutional agenda)	**= 공식의제·정부의제·기관의제·공식의제·행동의제** :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인식한 문제,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

• **정책의제의 종류**

구 분	정정길	R. Eyestone	R. Cobb & C. Elder	J. Anderson	안해균
정부의 채택 전(사회영역 / 포괄적)	공중의제	공중의제(public issue)	체제적 의제(systematic agenda)	토의의제	환경의제
정부의 채택 후(정부영역 / 구체적)	정부의제	공식의제(official issue)	제도적 의제(institutional agenda)	행동의제	정부의제

• **공중의제(체제의제)와 정부의제(제도적 의제)**

공중의제	정부의 채택 전	추상적	일반적 항목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중심축으로 민감하게 형성·전환	문제해결가능성 더 낮음
정부의제	정부의 채택 후	구체적	항목의 수가 더 적음	정책결정에 내재하는 타성과 편견으로 환경 변화에 부적응	문제해결가능성 더 높음

③ (×)

•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 외부주도형 외부집단(민간)이 주도하여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결국 정부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공개도·참여도가 가장 높음.

•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정부 내에서 정책담당자(정부 내 최고정책결정자)의 주도로 정부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중의 관심·지원 확보 목적으로 정부가 행정 PR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공중의 지지를 동원(공중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침.

④ (×) 정책의제설정모형과 사회특징

외부주도형	주로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 모형**(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언론기관·정당의 역할 중요), **민주적 평등사회.**
동원형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이거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는 경우(관료적 계급사회, 권위적 계층주의사회)에 나타남**.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지도자가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 나타남(미국 Jhonson정부의 빈곤퇴치사업)
내부접근형	정책결정자와의 접촉이 빈번하고 용이한 집단에 의해 주도되며, **부(富)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통제적 불평등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선진국에서도 특수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경우(재분배정책보다 분배정책)나 외교·국방정책에서 나타남.

답 ①

[관련기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7급(1)

①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답 ④

18 우리나라 정부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②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③ 소관은 누가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분류로 환경부, 국방부 등을 들 수 있다.
④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해설

①② (○) • **중앙정부(국가) 예산과목 구분** : 국가재정법(제21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 실제 예산분류는 세입은 소관·관·항·목으로 구분. 세출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구분이 추가됨.

예산과목		입법과목(국회가 정함)				행정과목(행정부가 정함)			
세입예산		기관(소관)		관(款)	항(項)			목(目)	
세출 예산	기존	기관(소관)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세세항	목(目)	세목(細目)
	프로그램예산	기관(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비목	통계비목
분류기준		조직별 분류	기능별 분류		사업별·활동별 분류			품목별 분류	
특 징		신설·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신설·변경시 국회 의결 불필요(행정부 재량)			

•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 ·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 관 · 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③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조직별 분류에 해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소관별로 분류되며 중앙관서는 모두 세출예산을 가지지만, 세입예산을 갖지 않는 중앙관서(예 대통령비서실)도 있으므로 세출예산 중앙관서 수가 세입예산 중앙관서 수 보다 많음.

④ (×)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구분항목은 다름. ┌ **세출예산** : 장·관·항·세항·목
└ **세입예산** : 관·항·목(장·세항 없음)

답 ④

[관련기출]

1. 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 · 관 · 항 · 세항 · 목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과목 중에서 장 · 관 · 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 · 목은 행정과목이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④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국회8급

①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이를 관리한다.
③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설치한다.
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답 1. ① 2. ③

19 **정책 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②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③ 분배정책이란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④ 누진세의 실시, 임대주택건설, 영세민 취로사업 등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해설

① (○) • **포크배럴(Pork Barrel Politics ; 돼지구유통 정치, 나눠먹기식 정치)** : 연방의회의원이 출신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는 지역개발 정부보조금 의안과 관련된 용어. 정치인·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생색을 내기 위해 자기 지역구나 특정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려는 교량건설, 고속도로, 부두, 댐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정부예산을 끌어오는 이기적인 행위를 지칭하며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 남용 초래. 특정 배분정책에 관련된 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눠가지려 노력하는 현상을 지칭하기도 함.
② (○)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시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이 명백히 구별·선택되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누가 손해를 보고 혜택을 보는지를 놓고 벌이는 이해당사자간 영합(zero-sum) 게임 발생. 분배정책과 달리 양 집단 간 정치적 투쟁과 갈등이 심하며 이해관계 집단 간 협상을 통해 정책이 결정됨(다원주의).
③ (×) 재분배정책의 특징이다. 분배정책은 국민에게 권리나 편익·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④ (○) 참고로 영세민은 저소득층을 칭하는 말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을 쓰며, '영세민 취로사업'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저소득층) 취업지원'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

답 ③

[관련기출]

1.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7급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③ 누진세,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다음 내용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회8급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도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부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①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답 1. ③ 2. ②

20 **정책네트워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의 분석방법을 응용한다.
③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된다.
④ 행위자들 간의 연계는 의사소통과 전문지식, 신뢰, 그리고 여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해설

① (×), ③④(○)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라고 하는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 ① **정책영역별·문제별로 형성**(정책의 부분화·전문화)
> ②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조직인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성. 국가도 자신의 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려는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함.
> ③ **참여자간 교호작용을 통한 연계(linkage)의 형성** : 연계는 정책선호에 관한 의사표시, 전문지식 기타의 자원교환, 상호신뢰 구축의 통로가 되며 다소 간의 의존관계와 교환관계를 매개.
> ④ **경계의 존재** :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으며 경계의 제한성과 명료성은 상황에 따라 다름.
> ⑤ **제도적 특징**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의 총체라고 하는 '제도'적 특징을 지님.
> ⑥ **가변성·동태성** :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거시적·동태적 현상. 시간 흐름에 따라 내·외재적 요인에 의해 변동됨.

② (○)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개인의 개별적 속성(attribute)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y)에 초점을 두고 사회관계성의 형태나 사회적 연결성 패턴을 분석하여 사회구조를 연구. 사회적 행위자 간 관계를 관계의 밀도와 중심성 개념을 통해 분석

답 ①

[관련기출]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09 서울9급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2.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국가7급
   ① 참여자 간 교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다.
   ② 정책형성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까지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③ 정책네트워크 유형에는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정책문제망 등이 있다.
   ④ 행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사용된다.

답 1. ⑤ 2. ①

21 **정책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분석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한 뒤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정책델파이분석은 주요 정책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창출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법이다.
③ 던(W. N. Dunn)은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양적 방법으로 연장적 예측과 이론적 예측방법을 제시하였다.
④ 정책분석은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활동으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② (○) 전통적 델파이는 참여한 동질적 전문가간 합의를 도출하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토론 과정이 없다. 반면, 정책델파이는 정책문제에 관심이 있는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적인 이해관계나 견해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둔다. 참여자들 사이의 이질성(異質性)을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견해를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로 압축하는 절차를 밟는다. 복잡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주창자(창도자)와 찬·반론자를 가려내어 이들의 주장을 집약시킨다.

- **정책델파이의 절차** : ㉠ 쟁점의 구체화 ⇨ ㉡ 창도자의 선정 ⇨ ㉢ 설문지 설계 ⇨ ㉣ 1차 응답결과의 분석 ⇨ ㉤ 후속질문지 개발 ⇨ ㉥ 회의소집(양극화된 의견에 대한 참여자간 토론, 주장의 근거·당위성 제시와 의견교환)⇨ ㉦ 최종보고서 작성

③ (○)

정책대안의 결과(미래)예측 방법(W. Dunn)

예측방법	결과적 산출	예측근거	예측기법	성격
연장적 예측 (exterpolative)	투사(投射) (projection)	추세연장(외삽법) 경향분석, 귀납적 추론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최소자승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이동평균법, 자료전환법, 흑선법, 격변방법(대변동법), 구간외추정 등	합리적·분석적· **양적 방법**
이론적·인과적 예측 (theoretical)	예견(豫見) (prediction)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추론	투입·산출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 LP(선형계획), 구간추정, 이론지도, PERT, CPM, 시뮬레이션, 게임이론 등	
직관적·주관적 예측 (intuitive)	추측(推測) (conjecture)	주관적 판단, 통찰력, 역논리적 추론 등 질적 예측	Delphi, Brainstorming, 교차[상호]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시나리오작성, 명목집단토론기법, 변증법적 토론 등	비합리적·비분석적· **질적 방법**

④ (×) 정책분석은 체제분석과 관리과학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가치를 고려하며 목표의 설정을 물론 질적·사회적·정치적 요인까지 분석하며 정치적 합리성도 중시한다. 즉 체제분석의 논리에다 정책대안이 가져올 비용·효과의 분배적인 측면,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분석, 정책대안의 정치·행정·사회적 영향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정책분석은 바람직한 정책을 탐색하고 개발하고, 선택하기 위하여 이성과 증거를 활용하는 분석적 노력을 의미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하여 타당한 정보를 산출·활용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지적이고 분석적인 활동이다. 분석은 이성(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과 증거(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한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상과 타협, 그리고 권력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과는 구별된다.

- **정책분석[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요인(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다.**(○)
- **정책분석** 과정은 **타협·협상·권력작용** 등 정치성을 지닌 활동이다.(×)
- **정책결정** 과정은 **타협·협상·권력작용** 등 정치성을 지닌 활동이다.(○)

답 ④

[관련기출] 정책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국회8급
   ① 정책분석은 체제분석과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포함한다.
   ② 정책분석은 협상이나 타협 그리고 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한다.
   ③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적 측면을 분석한다.
   ④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⑤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답 ②

22 살라몬(L.M. Salamon)의 정책수단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정보는 정부가 민간에게 공적정보를 제공하는 직접 수단이다.
②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서비스 생산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③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수단이다.
④ 경제적 규제는 가격, 산출, 기업의 진입·퇴출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직접 수단이다.

해설

② (×) 바우처(현물보조증서, Voucher) :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한정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을 서비스 공급자(생산자)가 아니라 수요자(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①③④ (○) 살라몬은 공공정보(정보제공), 공기업, 경제적 규제를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

행정수단의 분류 - 직접성(directness) 기준 … 살라몬(L. M. Salamon)
• **직접성** : 공공활동을 허가하거나 재원을 조달하거나 개시한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

직접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정당성(정치적 지지)
높음	공적 보험, 직접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살라몬(L. Salamon)의 행정활동 수단 유형
행정활동 수단을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구조화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방법이라 하고 행정수단이 제공하는 산출물(행정활동)과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전달체계)를 기준으로 13개의 정책도구를 제시.
㉠ **재화와 서비스 제공** : 정부소비, 공기업, 계약, 보조금, 바우처
㉡ **보호와 금지**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공적 보험, 손해책임법
㉢ **재정적 인센티브와 부담** : 직접대출, 보증, 조세지출, 사용료, 과징금

정책수단(행정수단)	정의	정책산출물	전달체계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직접시행)	정부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직접 소비행위	재화·서비스	정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안전, 건강, 복지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또는 이를 제정, 집행, 강제,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	행태제약	정부/피규제자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가격, 산출 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 과정	공정가격	규제위원회
계약(Contracting)	정부 외부로부터의 재화 및 특정 생산품에 대한 구매와 관련된 행위	재화·서비스	기업/비영리기관
보조금(Grant)	공공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 가계 또는 다른 정부에게 공여하는 직·간접 지원금	재화·서비스	지방정부/비영리기관
직접대출(Direct Loan)	정부가 특정 개인 또는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관리	현금	정부
대출보증(Loan Guarantee)	민간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도록 정부가 보증	현금	민간은행
공적 보험(Government Insurance)	개인이나 기업이 당할 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입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체계	보호	정부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또는 감면	현금, 유인기제	조세당국
사용료·과징금(Fees and Charges)	특정 공공서비스의 이용비용을 민간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재정적 제재	조세당국
손해책임법(Tort liability law,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사법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금지적 처분을 요청하는 법규	사회적 보호	사법제도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서 운영되는 준독립적 기업	재화·서비스	준정부
바우처(현물보조증서, Voucher)	한정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지원	재화·서비스	정부/소비자

답 ②

[관련기출]

1. 다음 중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9급
① 경제규제란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 및 생산 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의미한다.
②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정부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바우처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④ 면허란 특정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2. 살라몬(L. M. 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에 의할 때 그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해경승진
① 낮은 직접성 - 손해책임법, 보조금, 바우처
② 높은 직접성 - 경제규제, 직접대부, 지급보증
③ 낮은 직접성 - 손해책임법, 보조금, 기업지원
④ 중간 직접성 - 조세지출, 사회규제, 부과금

3. 살라먼(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간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2016 국가7급
① 경제적 규제 ② 조세지출 ③ 직접대출 ④ 공기업

4.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2018 국가9급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보조금(grant)

① ㉠, ㉡, ㉢ ② ㉠, ㉣, ㉥ ③ ㉡, ㉢, ㉤ ④ ㉣, ㉤, ㉥

5.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 수단은? 2015 서울9급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6.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1 국가7급

㉠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 보조금(grant)	㉢ 바우처(voucher)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① ㉠, ㉢ ② ㉠, ㉣ ③ ㉡, ㉢ ④ ㉡, ㉣

답 1. ② 2. ② 3. ② 4. ③ 5. ④ 6. ③

2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이하 법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규정

①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가 없고 외부기관이 평가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2인) : 국무총리, 민간위원 중 1인
- 위원 : 관계 장관(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중앙행정기관장 소속 자체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정책을 평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등 주요현안시책 등을 평가(심층분석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사무(자치사무) 전반을 스스로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자체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평가
		합동평가 (원칙)	**중앙행정기관장과 행안부장관**이 합동으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합동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개별평가 (예외)	업무특성·평가시기상 합동평가 곤란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무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해 실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개별법에 의한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경영성과 평가. **외부기관이 실시(자체평가 없음)**

답 ③

[관련기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가9급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9급(하)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3.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9급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5. 다음 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3 국회8급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대해 최소한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답 1. ① 2. ③ 3. ① 4. ① 5. ③

24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① (○) 조례는 형식상으로는 모두 법규에 해당하나 실질적 내용에서 보면 법규에 해당하는 조례(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구분된다.
② (×) 종래에는 위임이 필요했으나 위임 없이 법령·조례의 범위에서(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 출제 당시(2021.10.16.)에는 옳은 지문이었지만 현재 법률 상으로는 틀린 지문이다.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조세법률주의**
법정세만 인정하고 법정외세를 부정하므로, 조례로 지방세를 만들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입각한 과세는 곤란하며 독자적 과세주권이 결여됨. 세율도 조례로 정할 수 없고 법률의 위임에 의해 법정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있지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범위도 좁음.

탄력세율제도(세율결정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적 인정)

의의	세법상 정해진 세율(표준세율 또는 기본세율)을 법률의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가감 즉,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91년 지방세법 개정시 처음 도입. 이 중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율결정권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적용 대상	㉠ **대통령령으로 가감** :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 지방의회가 세율 가감 못함. ㉡ **조례로 가감** :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소유분),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에만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의회가 법률이 정한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세율 가감 가능. ▪ 레저세, 지방소비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답 ②, ④

[관련기출]

1.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회8급
① 지방채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을수록 재정력지수가 높다.
③ 국고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에 재량권이 없다.
④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⑤ 지방세의 종목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2.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2014 군무원

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답 1. ① 2. ①

25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지역 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중이 크다.
②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외부효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쉽다.
④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안정화 기능 등 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① (○) 지방재정은 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
② (○) 지방재정은 일정 구역을 배경으로 하므로 재정활동의 효과가 그 구역을 넘어서는 외부효과성이 중앙재정보다 높음
③ (○)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에는 응능주의(應能主義 : 조세의 부담능력[담세능력]에 따른 조세부담)가 지배적이지만, 지방재정에는 응익주의(應益主義 : 행정서비스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가 강하게 지배(지방재정의 비용은 주로 직접적인 수혜자로부터 목적세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수익자부담적 수입에 의존). 일반국민의 담세 능력에 따른 보편적인 부과인 일반적 보상관계 보다는 개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강함.
④ (×) 국가재정은 자원배분(효율), 소득 재분배(형평), 경제안정화, 경제성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주로 자원배분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제도 비교

구 분	국가재정	지방재정
주체	단일주체(국가)	다수의 자치단체(다양성·복수성)
재정의 초점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재정의 기능	**포괄적 기능**(예산의 경제적 기능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안정화, 경제성장기능 모두 중시)	**자원배분의 기능 중심**
평가기준	**공평성 중시**	**효율성 중시**
서비스 성격	주로 순수공공재(국방, 외교, 사법 등) 공급 (비배제성·비경합성 강함)	주로 준공공재(상하수도·도로·교량 등) 공급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더 약함)
재원조달방식	**조세에 의존**	다양한 세입원(조세 + 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부담의 설계	**응능(應能) 부담** 원칙 중시(조세부담능력 기준) 가격원리 적용 곤란	**응익(應益)부담**(수익자부담) 원칙 가미 가격원리 적용 가능
보상관계	**일반적 보상**관계 위주(일반 국민에게 부담)	**개별적 보상**관계 첨가(개별 이용자에게 부담)
대표성의 수준	일반적 대표성	지역적 대표성
경쟁성	낮음	높음(지방정부 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 티부가설 적용)
탄력성, 자주성	상대적으로 약함	상대적으로 강함(자주성과 제약성의 양면성)
재정관행	**양출제입**(量出制入) : 세입결정권한 있음	**양입제출**(量入制出) : 세입결정권한 없음
공통점	공공성·강제성·계획성	

답 ④

[관련기출]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06 선관위9급

① 지방재정은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중앙재정은 주로 자원배분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②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조세 이외의 보다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③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의 선호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④ 중앙재정은 지방재정과 비교할 때 공평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답 ③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② (×) • **공기업의 장 임명** : 임원추천위가 복수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 거친 자 중
㉠ **원칙** :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예외** : **총수입액 1천억원 미만 or 직원 정원 500명 미만 공기업**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이하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답 ②

공공기관의 구분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요건** :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단, 이 요건에 해당되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②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기관.
③ **세부 지정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직원 정원 : 50명 이상, ㉡ 총수입액 : 30억원 이상, ㉢ 자산규모 : 10억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 기관의 성격,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가능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정부가 자체수입비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정.		공공기관 중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정부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지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①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②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85% 이상**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

27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이다.
②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시민들의 참여로 예산과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적법성(legitimacy)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④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

①② (○) 지방재정법 상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는 의무적 제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 관료 중심의 예산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선심성 예산운영 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의 민주적 정당성 또는 적법성(legitimacy)을 강화할 수 있다. 단, 제도 시행·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은 증가함.
④ (○) • **참여예산제도의 장점·한계**

장점	①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화, 주민참여로 재정의 부적절한 운영을 감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②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관료 중심의 예산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선심성 예산운영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③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으로 **재정의 대응성 제고**

한계	① 제도 시행·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② 참여시민의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 예산편성의 합리성·전문성 부족 ③ 주민참여예산기구와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와의 갈등(대의민주주의와의 충돌) ④ 지역이기주의 성격의 사업 반영, 주민의 요구에 따른 선심성 사업 추진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⑤ 자원배분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에 편향 ⑥ 기타 :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비에 부정적 영향 우려, 공무원의 부정적 인식,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경우 실효성 미흡

답 ③

28 **다음 중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③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한다.
④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③ (×)

-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 : 경기불안정 상황(실업·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서 총수요관리정책을 주장했으며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1970년대 세계석유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케인즈학파의 총수요관리정책은 거의 모든 시장경제국가가 수용한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충격(supply shock)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그 효과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세계석유파동 때문에 발생 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경제국가들이 완전고용을 위한 총수요정책보다는 오히려 총공급을 회복하는 공급정책과 물가상승 억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공급측 경제학** : 케인즈의 수요측면 재정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에는 무용성을 보이자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시하는 반케인즈 경제이론인 공급측 경제학이 주목받게 됨. 공급측경제학은 세율의 감소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여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답 ③

29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를 해야 한다.
② 코오즈(R. Coase)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③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 또는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으키는 공해는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해설

① (○)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 방안 : 내부화(외부효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편익이나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비용을 고려해 적정가격과 생산량을 결정)

공적 해결 방안 — 정부 개입	직접			금지 또는 허용 기준 제시. 위반시 벌금 부과
	간접	보조금		외부경제인 경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생산 장려(공적 유도)
		조세		외부비경제인 경우 조세(피구세 : Pigouvian tax 예 오염물질배출부과금) 부과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	의의	정부가 오염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허용량만큼 오염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구입한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기업 간 거래될 수 있음. 기업은 오염을 직접 줄이는 데 드는 오염저감비용과 오염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오염배출권을 매각 또는 매입.
			장점	정부가 오염배출 총량을 규제하되 시장유인적 방법을 활용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이는 방법.
			단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 및 집행비용이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 보장이 어려움.
사적 해결 방안	합병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나 이익을 보는 집단을 합병하는 방안
	코즈정리 Coase's Theorem - 자율적 협상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전통적 시각인 정부개입에 의한 피구세나 보조금과 달리 현대적 시각에서 제시된 내용. 코즈(R. Coase)는 ① 어느 **일방에게 소유권·재산권**(Property rights)이 잘 정의되어 있고, ② 민간 경제주체인 이해당사자 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합의 도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이 거의 없이** 자원배분에 관한 **자율적 협상**이 가능하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정부개입 없이 시장에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최적 생산량 달성)되게 된다고 주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권 설정이 곤란하고, 거래비용·불신이 존재하므로 현실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② (×) 코즈(R. Coase) 정리는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주장**.

③④ (○)

외부효과 : 가격기구(시장거래 ; 대가의 교환)를 통하지 않고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치는 현상. 외부효과는 비용(비용부담자)과 편익(수혜자)이 불일치를 초래해 재화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과다 소비·공급되게 됨.

종 류	외부경제(외부편익효과)	외부비경제·외부불경제(외부비용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정(正 ; ⊕)의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부(負, ⊖)의 외부효과
의 미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이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적 편익 < 사회적 편익(개인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는 **손해·불이익을 주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 비용 < 사회적 비용(개인적 편익 > 사회적 편익)
예	과수원과 양봉업자, 무료예방접종, 지역개발사업 실시와 인근지역 지가상승	공해(화장장·쓰레기소각장과 인근주민), 스팸메일, 도로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소음피해, 불법주차
문제 (시장실패)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 생산의 외부경제 :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예 나무심기) • 소비의 외부경제 :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소비**(예 대중교통이용)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 생산의 외부비경제 :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예 오염물질 방류) • 소비의 외부비경제 :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소비**(예 옆사람 담배연기)
정부개입	사회적 최적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정당화 됨	
	보조금 지급(공적 유도) ⇨ 더 생산 또는 소비하도록 유인	**조세(피구세), 벌금 부과(정부 규제)** ⇨ 덜 생산 또는 소비되도록 규제

답 ②

[관련기출]

1.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9급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 : 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③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즈(R. 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2.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행정사

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②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③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④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⑤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3. 정부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2004 서울7급(1) 수정

① 코즈의 정리 ② 불가능성의 정리 ③ 발로하는 투표 ④ 협상의 원리 ⑤ 피구세

답 1. ④ 2. ③ 3. ①

30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논리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②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산업안전규제, 환경오염규제는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③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이 활발해진다.
④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대중적 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해설

① (×) 고객의 정치에서는 소수 수혜자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규제기관의 정책형성·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의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관료(규제기관)가 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 수혜자집단(피규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Agent)을 수행하는 지대추구현상(rent seeking)이나 포획현상(capture)이 강하게 나타나고, 양자 간 공생관계를 보이며,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수 있다. 정부규제 도입 과정에서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가 나타나며 소비자단체 등 공익집단의 항의나 반박이 없는 한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②④ (○)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집중(특정 소수에게 높은 수준으로 집중)	**분산**(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수준으로 분산)
감지된 규제의 비용(비용부담집단)	**집중**(특정 소수에게 높은 수준으로 집중)	**이익집단정치**(interest - group politics)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규제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분산(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수준으로 분산)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대중의 정치(다수의 정치)**(majoritarian politics) 예 사회적 차별 규제, 낙태·종교활동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③ (○) **규제정치모형의 가정**

- 규제의 편익이나 비용이 특 정 소수에게 높은 수준으로 **집중** ⇨ **집단행동의 가능성 높음(집단행동의 딜레마 적음)**
- 규제의 편익이나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수준으로 **분산** ⇨ **집단행동의 가능성 낮음(집단행동의 딜레마 큼)**

답 ①

[관련기출]

1.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경찰간부

① '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③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④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말한다.

2.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해경승진

㉠ 환경오염규제의 경우,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는 대중정치의 상황이 된다.
㉡ 고객정치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고객정치는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중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한다.
㉣ 이익집단정치는 낙태규제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 기업가적 정치는 비용부담집단은 규제기관을 포획하므로 정책채택이 어렵거나 느슨한 정책집행이 발생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 1. ③ 2. ③ 3. ②

31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강화·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신설·강화·완화 ⇨ 신설·강화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신설·강화시 규제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뤄지며 규제 후에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답 ①

[관련기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14 서울7급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도구이다.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답 ③

32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대추구이론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로비와 같은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② X-비효율성이란, 관료제 안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 비용과 편익의 분리(괴리)는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④ X-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해설

① (○) 지대추구행위는 **국가가 승인한 독점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다.** 특정의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정치인·관료와 결탁하여 각종 정부규제 및 해제, 법률제정 등을 요구·지지함으로써 그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부나 가치의 이전을 꾀하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로비활동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상황을 만들면 이익집단들이 독점적 이권을 따내고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체제라면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였을 자금을 정부에 대한 로비, 뇌물제공 등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되어 낭비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② (×) 관료제 안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상은 행정조직의 내부성이다.

> **행정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 - 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괴리·유리[遊離]·절연[絶緣]), 사적 목표의 설정** : 모든 조직은 내부의 일상적 관리 및 운영관련 활동수행 지침(SOP, 예산분배규칙)이 필요하며, 시장(민간부문)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 손익분기점, 시장점유율 등 분명한 경영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행동하지만, 정부부문의 경우 행정활동의 무형성·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객관적 행동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조직 스스로 지표(내부기준)를 개발하여 행동함.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나 기준 설정시 사회적 목표(공익)보다는 관료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목표전환)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목표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행정조직의 내부성이라 함.
> ㉠ **관료제국주의**(Empire Building) : 관료들이 자기 부처의 예산(**관료예산극대화가설**)·인력·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
> ㉡ **권력의 원천인 정보의 획득과 통제에 의한 권력 확대 추구, 정보의 독점과 유용**(流用)
> ㉢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 집착**
> ㉣ **최신기술에의 집착 또는 새로운 기술도입에의 반발**

> X-비효율성-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이 제시**
> ① 정부나 기업이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상의 효율성 추구 노력이나 유인(incentives)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서, 법적 제도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행태적 요인(사명감·직업의식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관리상·경영상 비효율성을 의미함(예 무사안일한 근무성향, 소극적인 근무태도).
> ②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경제학에서는 평균비용곡선보다 높은 비용을 생산하는 비효율성을 말함.
> X-비효율성이 지속되면 기업의 경우 조직퇴출(폐업)로 이어지지만, 정부부문은 퇴출이 불가능하므로 더 큰 비효율 초래.
> ③ 책임소재의 명확성 결여, 인센티브 제도 미흡,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상황일수록 X-비효율성 증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자 측에서도 발생.

③ (○) **편익(수혜자)과 비용(비용부담자)의 불일치(절연·분리)으로 인한 정부개입에 대한 초과수요 :** 정부정책으로 인해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서로 다름 ⇨ 편익과 비용 간 절연(decoupling) ⇨ 정부개입에 대한 초과수요 초래.

구분	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
개념	현재 또는 미래의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특수한 소수집단에 집중적으로 귀속**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불특정 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경우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
문제 성격	순수한 경제적 문제	정치·경제적 문제
활용 수단	**포획, 지대추구** ⇨ 수혜자인 소수집단의 요구 관철	**투표나 선거** ⇨ 수혜자인 다수집단의 요구 관철
관련 내용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고객의 정치모형**과 연관	**재분배정책**과 관련.
결과	정부개입에 대한 초과수요로 연결되어 정부실패 초래	

④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설정(행정조직의 내부성)	○(관료이익 추구 제거)		
X-비효율, 비용체증(비용≠수익)	○(민간기업은 효율성 확보)	○(비효율적 보조금 삭각)	○(규제에 따른 비용 감소)
파생적 외부효과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규제로 인한 부작용 방지)
권력의 편재	○(독점적 권력에 따른 특혜 방지)		○(규제를 통한 특혜제공 방지)

답 ②

33 **스티글러(G. Stigler)의 정부규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을 반영한 정부규제이론이다.
② 정부규제의 수요자는 피규제산업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이다.
③ 관료는 공익을 대변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한다.
④ 정치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므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설

③ (×) 스티글러의 정부규제론인 경제규제이론은 공공선택론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인간을 자기 이익·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합리인으로 보므로 관료, 정치인, 이익집단 모두를 이기적인 존재로 본다. 규제기관인 관료는 피규제기관에 포획되어 피규제기관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대다수 국민을 위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 스티글러(G. Stigler)는 1971년에 발표한 「경제 규제의 이론(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에서 규제포획이론을 발표하고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정부규제이론을 정립하였다. 규제포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당하는 현상으로 이익단체나 다른 정치적 참여자들은 정부의 규제적·강제적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과 규정을 바꿀 거라고 주장했다. 정부규제를 경제적 재화로 파악하고, 규제도 수요와 공급측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규제의 공급자는 정부이고 수요자는 주로 이익집단 특정 산업의 이익집단은 관련산업이나 업종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규제정책을 수요한다. 이들이 수요하는 정책유형은 직접적 보조금(direct subsidy), 진입제한, 대체적 산업관계에 있는 업종의 억제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업의 지원, 시장경쟁가격 이상의 가격책정 등이다. 정부규제를 수요하는 이익집단 간에 있어서 이익의 크기는 이익집단간의 정치적 균형과정에서의 조직화 비용과 정보비용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규제는 대규모 이익집단보다는 소규모 특수 이익집단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정부의 각종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며, 규제권한을 부여받은 규제기관이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규제기관은 피규제자가 없으면 조직과 인력이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피규제자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인 경우가 많다. 피규제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규제기관은 피규제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 개인의 이익은 결국 무시되고 만다. 즉 규제정책은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답 ③

34 리그스(F.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생태론적 접근방법에 기반을 둔다.
②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으로서는 고도의 이질성, 형식주의 등이 있다.
③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④ 프리즘적 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은 사랑방모형이다.

해설

① (×) 비생태론적 접근(폐쇄체제관)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생태론적 접근(개방체제관)에 기반을 둔다.

리그스(F. Riggs) 의 접근방법 분류 - 실증적·경험적 접근, 일반법칙적 접근, 생태론적 접근 중시

연구방법	규범적 접근	바람직한 행정상태의 설정·연구(가치)	⇨	실증적·경험적 접근	있는 그대로의 행정현실을 연구(사실)
연구범위	개별사례적 접근	특정국가의 테두리 내에서만 연구(특수성)	⇨	일반 법칙적 접근	각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 연구(보편성)
생태적 요인 고려 여부	비생태론적 접근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제이론	⇨	생태론적 접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개방체제이론

리그스(F. Riggs) 사회3원론(1960년) : 사회2원론은 발전도상의 과도기 사회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여 3원론으로 수정

구 분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分光·굴절 사회)		분화사회
단선적 진화론	농업사회(Agraria)	⇨	전이·과도기 사회(Transitia)	⇨	산업사회(Industria)
기능(분화의 과정)	융합적(Fused), 미분화		프리즘적(Prismatic), 半분화		분화적(Diffracted or refracted)
구조 / 역할	전통적 / 미발전		과도적 / 발전도상		현대적 / 발전적
관료제	Chamber(안방) 모형		**Sala(사랑방) 모형**		Office(관청·사무실) 모형
행정수행자	자유사상가(Literatus)		소수의 창조적 선각자(Intelligentsia)		지성인(Intellectual)

살라모형(Sala Model, 사랑방모형)의 특징(프리즘적 사회의 관료제 모형)

고도의 이질혼합성	전통적 특징과 현대적 특징의 혼합.
다규범성, 모순적 상용성(相容性), 양향적 가치체계(ambi - valence)	현대적 규범과 전통적 규범·관습이 중첩(양향적 가치체계)되어 의견일치가 미흡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규범의 성격도 차이가 심하며, 가치판단의 일관성이 없음.
기능중복(overlapping)	선진국 제도를 모방하여, 기능이 분화된 행정체제와 미분화된 전통적 행정구조의 중복. 공식적으로는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복되어 있음.
신분과 계약의 혼합관계 (status - contract nexus)	공식적으로는 계약이 법적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나, 현실적으로는 신분적 질서(개인적 신분, 사회적 지위, 생활상태)가 강하게 작용.
양초점성(bifocalism)	고객에 대응하는 관료행태의 이중성 – 관료의 권한이 법제상으로는 미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법적 권한은 적으나, 실제적 권한은 큼).
의존증후군 (dependence syndrome)	정치권력자는 생산에 공헌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권력을 활용하여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수탈하며, 기업가의 재력에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임.
천민(pariah)자본주의 천민기업가	올바른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생산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방식에 의해 부를 추구·축적하는 자본주의 형태. 부족한 자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략적으로만 활용하며 정경유착 발생.
권한과 통제의 불균형	권력구조는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통제는 분산(권력과 통제의 불균형)
형식주의(formalism) 표리부동성(double talk)	공식적 행동규범과 실제행정 간 불일치. 법규와 사실상 집행의 불일치. 법령 및 행정상의 모든 의사전달이 표면적인 의미 내용과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가 존재함.
연고우선주의(nepotism)	가족·친족관계에 의한 관직 임용방식, 온정주의
다분파성·당파성·파벌성	비교적 여러 개의 적대적 공동체가 존재하며 대입·투쟁이 심화
가치의 응집현상	사회가치·권력가치를 소수 엘리트가 독점
가격의 불확정성 (bazaar canteen)	정찰가격이 없고, 시장 외적 요인인 상거래자와의 신분과 연고관계를 기준으로 비정찰가격이 결정되거나, 공납적(貢納的)·봉납적(捧納的)·사여적(賜與的)인 지출이 나타남.
상·하향적 누수체계와 전략적 지출	세입·세출예산의 누수(trickle up trickle down system – 세입·세출 과정에서의 부정축재), 관료사회 내의 상하 간의 상납, 부하를 무마시키기 위한 지출 등 전략적 지출(뇌물)의 만연

답 ①

[관련기출] 리그스의 행정접근방법이 아닌 것은 ? 2007 경남9급

① 규범적 접근방법 ⇨ 경험적 접근방법 ② 개별사례적 접근방법 ⇨ 일반법칙적 접근방법
③ 안정지향적 접근방법 ⇨ 발전지향적 접근방법 ④ 비생태론적 접근방법 ⇨ 생태론적 접근방법

답 ③

35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 분석단위로 함
㉡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 개인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
㉤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처방
㉥ 전통적인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적 장치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접근방법 -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 : 거시적 설명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경제 및 행정현상 분석. 의사결정 주체는 개인이지, 집단 자체는 선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부·행정기관·조직 등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그 구성원인 개인만이 실제의 결정자라고 봄.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이 가능하고, 집단적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개인적 선택행위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을 전제로 개개인의 정치적 과정을 통한 선택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 분석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 (○) **"비시장적 의사결정(non - market decision -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것"**
- **연구대상 : 비시장적 분야인 정치·행정 분야** 예 정부관료제, 투표, 정당제도, 의회, 이익집단 등
- **방법론 : 경제학적 분석도구**(정치학적 분석도구x)를 사용, 정치과정에 시장경제적 대안을 도입
- **비시장적 의사결정(정치적 결정)** : 시장의 수요·공급원리만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조직체를 통해서도 결정되는 것으로, 공공정책결정(공공재의 공급수준에 관한 결정 ; 정치현상)에 관한 것.
- **공공정책** : 희소한 공공재·공공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수단.

㉢ (○) **인간관 - 이기적·합리적 경제인(Homo Economicus) - 자기효용극대화** :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 서로 다른 선호와 이기심을 가진 자기이익지향적 인간(이기적 인간)이고, ㉡ 대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이며, ㉢ 자기선호에 비춰 최고의 순이득을 가져올 대안을 선택하는 극대화전략(자기효용극대화)을 채택한다고 가정. 개인은 공공재를 최소비용으로 향유하려하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개선에는 자발적 의욕을 보이지 않으며, 공익추구를 위해 자발적 단체를 구성하지 않음(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 관료도 더 이상 윤리적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

㉣ (×) **사회적 불평등 시정기제로서의 정부역할 간과(형평성 문제 간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주의 접근** :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가 보유하는 점, 즉 정부는 경제적 규제, 교육·사회간접자본·환경보전·사회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 경쟁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

㉤ (○)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용의 극소화와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을 시장 경제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

㉥ (×)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시에 조직화된 압력단체의 영향력 하에 이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편향적으로 공급하고 주된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답 ④

36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법률, 규칙 등을 제도로 간주하지만,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은 제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전략과 행동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또 지속적인 규칙성을 유도하는 틀로 이해하지만, 그 제도는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본다.

해설

① (○)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
㉠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띠며, 미래의 선택과 변화 방향을 제약. 그 결과 한 국가제도의 역사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해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남(제도의 자기 강화와 긍정적 피드백).
㉡ **비효율적·비합리적 제도의 인정** : 특정 정책 또는 경로가 한 번 선택되면, 나중에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기존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불합리한 제도의 지속 이유 설명).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므로 새로운 시점에서의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함. 결국 제도란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효율성·비합리성을 인정.

② (×) **신제도론에서의 제도의 범위(공식적·비공식적 제도)** : 구제도론은 주로 정치학에서 활용되는 것으로써 국가기관의 공식적 구조와 법체계(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두었지만, 신제도론은 비공식적 제도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즉,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제반요소에 관심을 둠으로써 제도의 범주를 훨씬 넓혀 공식화된 정치체계는 물론 일련의 행위규범이나 관행·규칙도 인간의 행위를 규칙적으로 제약할 경우 제도에 포함시킨다.

③ (○)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사회문화적 제약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제약되며, 사회문화적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한다. 인간이나 조직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등 제도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행태나 구조를 적응해야만 인간이나 조직의 정당성·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타산적 이익이나 도구적·전략적인 것에 기인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문화종속적·귀납적 입장(문화라는 행동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을 가정)이다.

④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가 없는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사회적 딜레마 상태)로 가정하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제도가 형성된다. 제도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쉽게 생성·폐지될 수 있다.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정된 선호나 기호(嗜好)의 집합을 지니며, 개인은 이러한 선호의 성취를 극대화(효용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 행위자의 행태는 비개인적·역사적 힘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에 의해 이끌린다.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경우 제도는 균형상태에 놓인다. 제도나 균형상태의 변화는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개인이 경험하는 편익이 비용(특히, 거래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 수 있디(비용·편익분석).

답 ②

[관련기출]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019 군무원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
② 비공식적인 것은 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분균형성을 중시했다.
④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동적인 것으로 본다.

답 ②

37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메커니즘을 정부에 적용하고자 한다.
②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영화나 민간위탁,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작은 정부를 강조한다.

해설

② (×) **정책능력 강화(촉진적 정부)** : 노젓기(사공)보다 방향키(조타수·선장) 역할 강조, 선수보다는 심판관 역할 중시. **정책결정(정책기능)과 정책집행(관리기능)을 분리시켜(정책·관리2원론), 정책결정기능(방향키)에 역점**을 두고 서비스 직접 제공기능(노젓기 ; 집행)은 민영화함으로써 작은 정부 구현.

답 ②

[관련기출]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2013 국가9급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 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답 ①

38 다원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고 본다.
② 이익집단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③ 신다원주의론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④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본다.

해설

① (×) 다원주의에 따르면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진다**.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이익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는 규모나 전문성, 정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정치적 자원은 권력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부, 자금, 명성, 인망, 정부의 공식지위, 정보, 시간적 여유 등)하며 권력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는 않아 정치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부족한 집단은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정치적 자원을 보유하여 종합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③ (○) 신다원주의론은 전통적 다원주의 이론이 산업사회에서 적용상 한계를 보임에 따라 엘리트 이론의 핵심적 요소 중 일부를 다원론적 위치에서 통합시켜 형성한 이론이다(Peterson, C. Lindblom, P. Dunleavy). 특정 엘리트집단의 영향력은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으며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 엘리트집단이 정부와 사회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인정했지만, 집단 간 비동등성 주장-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음을 인정). 신다원주의론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평등구조를 심화시켜 왔으며 불평등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원주의론을 비판·수정하면서 나왔지만, 여전히 신다원주의론의 핵심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원주의	집단 간 동등성	분산된 엘리트 권력과 영향력	국가(정부)의 소극성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 인식
신다원주의	집단 간 비동등성(특정 집단의 강한 영향력)	누적적 엘리트 권력과 영향력	국가(정부)의 능동성	

답 ①

[관련기출]

1.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서울9급(2)
   ①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②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③ 이익집단들 간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회에 기인한다.
   ④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 다원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집단과정이론과 다원적 권력이론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이론에 공통된 다원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틀린 것은? 2019 서울7급(1)
   ① 이익집단들 간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순기능적이라고 본다.
   ②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성을 띤다.
   ③ 이익집단들 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④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며 이익집단들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답 1. ③ 2. ④

39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사정위원회)는 조합주의에 따른 정책조정방식이다.
②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이라고 본다.
③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해설

① (○)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勞·使·政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조합주의나 융합적 조합주의로 본다.
조합주의(corporatism)란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또는 노사정(勞使政) 간의 협조체제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조합주의란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익집단 간의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의미하며, 기업가단체의 대표·노동자대표·정부대표의 3자협의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원래 조합주의, 또는 코포라티즘이라는 말에는 '단체들간의 협조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형성된다'는 관념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코포라티즘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형적으로 조합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모범적인 노사협조체제를 구현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이다. 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자체의 이익와 의지를 가지고 이익집단과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합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학자는 P.C. Schmitter이다. 슈미터는 다원주의에 대한 대안적 이익대표의 한 유형으로 조합주의를 논의하였다.

② (×)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 : 국가는 중립적·수동적 중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주도적·능동적 실체이며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립적 실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 국가의 독자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이 강조되며, 국가는 이익집단으로부터 제약을 받지만 법률·조직·기타 자원을 지배함으로써 자율성을 지니고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주체적으로 조정 가능.

③ (○) 1970년대 조합주의는 국가의 소극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다원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논의된 국가주의 시각의 이론.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와 이익집단과의 상호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중시. 다원주의와 달리 정부는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봄.
- **편익 교환의 관계** : 정부에 의해 독점적 이익대표권을 부여받은 이익집단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익집단의 요구를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통제를 수용. 정부와 이익집단 간 편익의 상호관계가 성립하며, 이익집단은 정부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적임.

④ (○)

조합주의의 유형

국가 조합주의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계. 국가가 통치력 강화를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를 기본요소로 하며, 이익의 상향적인 투입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동원과 통제**를 중시. 이 경우 **조합은 국가의 보조적·종속적 기관이 됨.** ※ 국가조합주의에서 정책은 국가와 사회를 일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가치들을 통제·조정하며, 정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익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정부이익에 합치되는 집단의 투입은 과다 반영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집단의 투입은 배제·통제한다. **국가조합주의의 유형**(통제 정도 기준) - A. Stepan **융합적 (inclusive) 조합주의** : 국가가 노동계급과 여타 사회세력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접근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 지배세력 구성에서 국가-자본-노동의 수평적 공존과 협조체제 형성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구 노(勞)·사(使)·정(政) 위원회) **배제적 (exclusive) 조합주의** : 강압적 수단을 통해 노동계급을 탈정치화시키고 관료적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국가가 노동부분을 통제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 국가와 자본이 지배동맹을 형성하고 기업가집단 등의 이익표출활동은 허용하면서, 노동자·농민들의 이익표출활동을 탄압하거나 그들 집단의 지도부를 어용화시키며, 이익집단은 오히려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존재함.
사회 조합주의	**서구의 선진민주국가의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성.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한 이익집단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 이익집단과 국가 간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이익집단의 자율성**을 본질로 하며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통제기능을 배제하고 **국가로의 상향적인 투입기능을 중시.**

답 ②

[관련기출] 조합주의(corporat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7급

① 정부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
② 이익집단은 단일적·위계적인 이익대표체계를 형성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책과정에 투입한다.

답 ①

40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데이터는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의미한다.
③ 미국의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와 유사한 개념이다.
④ 데이터기반 행정은 행정의 정치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해설

①②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③ (○)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적 원조격인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이란 정책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다. 정책 과정에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통계와 연구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이데올로기나 의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비하여 과정이 투명해지고 내용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증거기반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면서, 엄밀하고 포괄적인 증거를 상호 경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과 수단의 상호연계 구조에서 대안의 포괄적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 의하면, 증거기반정책은 정책이나 대안을 수립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의견·이익기반행정이다. 증거기반정책은 정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전통 행정학 이론에 부합하며, 정책 대상에 대한 주요 설득 도구인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론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

- 2013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증거기반정책 어젠다(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를 발표하고 2016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설치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을 제정했다. 정부의 공식행정위원회로 증거기반행정을 준비한 미국은 2018년 증거기반행정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을 통해 범정부적 데이터기반행정을 매해 더욱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관마다 증거기반 행정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통계전문가를 활용하며 증거수립을 위한 데이터자문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제도화됐고 데이터개방도 법으로 구체화됐다. 데이터책임관제도, 기밀데이터보호와 통계데이터 효율화, 데이터접근권 관련 정책도 포함시켰다.

④ (×)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므로 정치성·민주성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의 비전과 추진목표**

비전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추진목표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데이터 통합 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답 ④